

總 · 學長 選出, 全體 구성원 의 共同參與로

金 日 秀
(高麗大 法學科)

1. 問題의 提起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 생활의 각 방면에서 민주화를 위한 갈등과 진통을 겪고 있다. 대학 사회도 그 예외는 아니다. 각 대학마다 自律과 民主化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지만 大學社會를 이루는 각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수렴되어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인해 지금 우리의 대학 사회는 격심한 의견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다. 대학의 재정상의 비공개 운영과 비리 의혹으로 인한 대학 등록금 동결 움직임, 입시 부정 의혹으로 인한 대학 행정의 공개 요구, 총 · 학장 직접 선출에 학내 諸 구성원과 단체의 참여 요구 등으로 인한 갈등과 진통으로 이번 학기만 해도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 농성과 수업 거부 및 이에 대응한 학교 또는 문교부 측의 휴업 조치 등의 대립 상황이 깊어 가더니 부산 동의대에

서는 경찰 참사 사건과 같은 비극도 나타났다.

물론 대학도 사회 전체의 한 부분을 이루는 단위 사회인 만큼 대학내의 문제도 사회 전체의 문제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요구가 학내에서 증폭되어 경찰과 대치되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굳이 대학 사회의 문제라고만 잘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민주화와 자율을 위한 움직임 가운데도 대학 내부의 문제에 국한되거나 비중이 담겨 있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총 · 학장 선출 문제가 바로 그 단적인 예이다.

종래까지 대학의 총 · 학장 선출은 국 · 공립대학의 경우 문교부나 행정 기관의 長이 임명을 했고,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이 문교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해 왔다. 이것이 참여적 민주주의의 방식에 맞지 않는 권위주의적 모델이라고 하여 제 6 공화국 출범 이후 새로이 총

· 학장을 선출하는 대학에서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적어도 教授 直選의 방법으로 총 · 학장이 선출된 뒤 현행 교육법 범위 안에서 문교부의 薦東된 承認 내지 재단의 薦東된 任命이 뒤따르게 됨으로써 종전의 권위주의적 모델에서의 一大 轉換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 大學의 總 · 學長 選出에는 教授 · 講師 · 學生 · 事務職員 · 同門까지 포함한 대학의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안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世宗大의 경우는 이같은 최선의 모델에 따른 총장 선출을 거쳤지만 文教部의 승인을 얻지 못함으로써 未完의 단계에 머물렀고, 高麗大의 경우는 教授協議會에서 教授들만이 직선으로 총장을 선출하여 문교부의 승인과 재단의 임명 절차가 끝났으나 學內 諸構成員間의 총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금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大學社會가 진정한 의미에서 自律化와 民主化를 누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大學의 總·學長 選出만큼은 大學의 全體 構成員이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所見을 筆者는 갖고 있다.

2. 두 가지 論據

1) 현실적인 이유

총·학장 선출을 교수들만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순리라고 생각하는 가장 온건한 민주 발전의 단계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그럴 수도 있다. 다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자율화의 의식은 교수 계층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수준보다 훨씬 다양해졌고 앞선 점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총·학장 선출이 교수들의 고유 권한이어야 한다는 當爲論에 앞서서 學內에 있는 교수 이외의 다른 構成員들의 참여 요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그와 같은 참여 요구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단독 선출 과정에 충돌하는 세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일어난 총장 선출 과정에서의 학생·교직원·교수간의 충돌은 바로 우리 大學社會가 총장을 단지 교수의 대표로서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대학의 전체 구성원의 대

표로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새삼스러운 이야기같지만 大學의 任務은 硏究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학문과 예술의 자유로운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이같은 임무에 기여함에 있어 學內 諸構成員 사이에 각각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주어져 있는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 다른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각각의 독자성을 잃음 없이 共同의 參與와 批判과 協力에 의해 조화되지 않고는 대학 본연의 임무인 學問과 藝術의 자유로운 발전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이유로 大學의 總·學長은 多樣性 속에서 一體性을 묶어가는 救心點으로서 學問·藝術·財政·行政·經營을 망라하는 大學 機能을 짊어져야 할 負擔을 안는 동시에 名譽를 얻게 되는 職分이다. 만약 대학의 총·학장이 가르침과 연구의 심봉이라면 교수들만이 이를 선출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만약 대학의 총·학장이 行政과 經營의 실무가라면 事務職員들이 이를 선출하는 것도 논리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학의 총·학장은 이것을 망라하는 職分이기 때문에 그의 선출에 大學의 모든 構成員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 현실을 현실로서 수용하지 못하고 외면하거나 피하려고 할 때 거기에 갈등과 충돌은 야기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계층만이 단독으로 뽑아 놓은 총·학장은 뽑혀서도 제 구실

을 제대로 해나가기 어려운 현실적인 장애에 부딪친다. 그러한 현실은 대학의 본래의 임무를 대학의 구성원들 스스로 擧意하는 일이고 그 원인은 어느 한 계층의 우월과 자만심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大學의 총·학장 선출 문제에 관한 한 교수와 학생과 교직원 등 학내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 관심과 공동 참여의 요구가 수렴되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도 그것이 자율화와 민주화의 시대에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대학 본연의 임무에 공동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있다. 教授이기 때문에 學生과 校職員과 동등하게 자리를 맞대고 앉아 총·학장을 함께 선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자율과 민주 방식에 맞지 않는 권위주의적 태도 외에 다름아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목소리들을 솔직히 현실로서 인정해 주고 그들의 주장에서 수용 가능한 것과 수용 불가능한 것들의 한계를 함께 논의해 봄으로써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교육 현장에서 일방적인 지식 독점과 지식 전달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고 또 지나가야 한다. 함께 더불어 가르치고 배우며 연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부터 대학 안에서 어느 한 계층과 집단만이 독점적으로 누리는 권위의 제도화는 극복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함께 더불어 의논하고 결정하는 대학 풍토의 전환기에 우리는 지금 서 있다.

보다 진취적이고 開眼의인 眼目으로 총·학장 선출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충돌을 풀어나가야 한다. 총·학장 선출 문제가 교수의 전통적인 권위의 마지막 보루가 아님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2) 당위적인 이유

教授 이외의 學生 또는 事務職員들도 총·학장 선출에 참여하겠다는 요구는 그것이 大學의 自律化와 民主化의 발전 방향에 비추어 볼 때 參與民主主義의 방식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學生 또는 校職員 계층에 대해서도 自律性과 自己責任의 질과 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물론 民主化의 방식은 다양하고 단계도 여러 가지일 수 있다. 그래서 학생·교직원의 이러한 요구가 현실의 일반적인 민주화 의식 수준에 비추어 급진적인 요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고의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은 정규적인 교육과정으로는 민주 시민 양성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대학이 민주주의와 자율을 훈련시키고 체득하게 하는 요람이요 민주 시민의 정치 의식을 깨우쳐 주는 사회 교육의 모범이어야 한다면, 대학 스스로 그들의 성숙한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을 미성숙한 계층으로 평가절하시키는 어떤 제도적 장치도 정당성과 설득력을 지닐 수 없다.

대학생과 교직원도 민주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정의 중요한 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을 선출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가 실시되면 물론 이에도 선거권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 선진국의 참정권 연령 수준으로 18세 이상인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한다면 왜 대학의 總·學長 選出에만 유독 이들의 참여가 배제되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해명할 길이 없다. 教授이기 때문에 判斷에 있어서 정확하고 행동에 있어서 공정하며, 민주 의식에 있어서 앞서고 진리 인식에 있어서 우월하여 總·學長 選出만큼은 교수만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기되어야 마땅하다. 그러한 주장의 솔직한 배경은 아마도 우리의 教授觀이 아직 전통적인 書院教育이나 書堂教育 시기의 訓長意識에서 탈피하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社會는 急變하고 있고 傳統倫理도 변모하고 있다. 大學內의 구성원인 學生과 校職員도 대학의 分身이다. 대학 명예의 상징이요 實務의 頂點인 總·學長에 대해 그들도 교수와 마찬가지로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해야 하리라고 본다. 그들은 말하려고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제는 그들에게도 말할 權利를 주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國際化의 時代에 살고 있다. 先進 外國의 大學制度는 大學內의 각 구성원들에게 독자적인 지위와 자격과 權利·義務를 부여함으로

서 大學自律과 大學民主主義를 실천해 온 지 오래다. 教授가 絕對君主視 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가 버렸다. 教授階層 스스로 그 부담스러운 몫을 포기해 버린 지 오래되었다. 대학생들과 교직원·강사·조교들이 대학 임무의 실현에 기여하는 대학 구성원들로서 교수와 같은 자리에서 대학의 총·학장 선출을 투표로 결정하는 현실이 정착된 지 오래다. 이 국제화의 시대에 우리들만이 우리나라의 大學生과 校職員들을 잘못된 權威主義의 조롱에 가두어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세계의 어른 대접 받은 대학생들 중의 하나로 우리도 우리가 가르치는 大學生들을 우리의 잘못된 고정 관념의 사슬로부터 풀어주어야 하리라고 본다.

3. 選出方式

直選만이 民主的인 方式은 아니다. 學內 諸構成員들의 공동 참여로 대학의 총·학장을 선출하자면 間接選舉의 방법을 택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자면 먼저 大學社會의 諸構成員을 어떻게 분류하고 확정하느냐가 先決되어야 한다. 그 다음은 學內 諸構成員의 代表者 比率를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가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선출 방식에는 모델이 될 만한 외국의 제도들을 참조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大學社會가 갖는 특수성을 염두에 두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총·학장 [선출을 위한

학내 諸 단체의 대표자들의 共同機構가 있어야 한다. 이같은 공동 기구에 대표자를 선출·파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 教授·講師 및 助教·大學院 學生 및 大學生·校職員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大學은 公·私立을 불문하고 校友會의 參與度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校友會에 대해서도 그 문을 닫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校友會는 學內 構成員은 아니나 財政 寄與 등을 통해 大學의 임무에 적·간접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서 그 참여 가능성도 고려해 두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私立大學의 경우 財團의 영향력과 기여도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단의 참여에 대해서도 그 문을 열어 두는 것도 고려해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共同機構는 단일 기구로 하지 말고 二元機構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2~3 명의 總·學長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동 기구와 1 명의 총·학장 확정을 위한 공동 기구를 二元化하는 것이다.

總·學長 候補者 選出을 위한 공동 기구는 과반수를 넘는 비율로 교수 대표, 나머지 비율을 균등 배분하여 강사·조교, 대학원 학생, 대학생, 직원 대표로 나누어 차지하도록 한다. 예컨대 22 인으로 된 총장 후보 선출을 위한 공동 의회를 구성한다면 교수 대표 12 인, 강사 대표 2 인, 조교 대표 2 인, 대학원 학생 대표 2 인, 대학생 대표 2 인, 교직원 대표 2

인으로 배분하여 구성할 수 있음과 같다. 여기서 사정에 따라 교수 이외의 구성원 대표수를 倍數로 하자면 교수 대표를 25 인 정도로 구성하여 총 45 인으로 된 공동 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自薦·他薦으로 擧名된 몇 사람의 教授 중에서 2 내지 3 명의 후보자를 선출하여 이를 총장 확정 선출을 위한 공동 기구에 의뢰하는 것이다. 總·學長의 候補 適格은 教授에 국한시킨다.

總·學長 確定 選出을 위한 共同議會는 앞서 본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동 의회의 구성원 이외에 財團과 校友會도 자신들의 代表者를 참여시킨다. 따라서 이 議會의 代表者 人員 構成은 전원이 앞의 共同議會와 중복되지 않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도 구성 비율은 教授代表가 과반수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나머지 비율을 적절히 균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43 명으로 된 總長 確定 選出을 위한 共同議會를 구성한다면 教授代表 22 인, 講師代表 3 인, 助教代表 3 인, 大學院生代表 3 인, 大學生代表 3 인, 校職員代表 3 인, 財團代表 3 인, 校友會代表 3 인으로 배분하여 구성할 수 있음과 같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정에 따라 各 構成員의 代表者 數를 倍數로 늘려 86 명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여 선출된 총·학장은 현행 교육법 등의 개정이 없는 한 財團에서 文敎部에 취임 승인을 요청하고 文敎部가

그 취임을 승인함으로써 그 職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財團理事會 構成을 혁신하고 總長 確定 選出을 위한 共同議會를 이에 편입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축소하여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全體 構成員의 共同參與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히려 많을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이에서 본 모델은 '60 년대 말 학생 운동의 격랑을 겪고 난 西獨의 대학 제도 법률과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州法 등에 명시된 制度에서 시사받은 바가 많다. 日本의 전통 깊은 私學 중의 하나인 와세다大學의 총장 선출 방식도 이와 같은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세계가 한 생활권을 이루어 가고 있고 학문과 예술도 세계의 대학들과의 교류와 호흡을 같이하지 않고는 낙후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우리의 大學도 저들의 民主化와 自律化의 모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저들의 대학보다 더 알찬 民主化와 自律化의 모델을 창조적·진취적으로 개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총·학장 선출에 관한 학내 구성원들의 공동 참여는 세계적 조류이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견된다. 그렇다면 학생을 인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수 계층 스스로 학생들의 발을 씻겨 주는 겸손한 자세로 오늘의 이 학내 갈등 문제를 스스로 풀

어갈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리라고 본다. 狀態 속에 眞理가 있고 또 問題

解決의 열쇠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총·학장 선출 문제를 둘러싼 大學狀態야말로 새

로운 발전의 地平을 여는 지름길임에 틀림없다. *

<投 稿 案 內>

「大學教育」 제42호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公募합니다.

1. 內 容—大學教育에 관련된 論說, 대학에서의 研究 및 教授 활동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할 줄 수 있는 主題에 관한 논의, 각 學科의 教育 과정이나 敎수·학습 활동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와 외국에서의 연구 동향 소개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글
① 論 壇 ② 教授談論 ③ 學科別 敎育課題
2. 枚 數—200자 원고지 35매, 45매 또는 54매 (②는 15매 또는 23매)
3. 期 限—1989년 9월 20일
4. 稿 料—매당 3,000원(채택된 원고에 한함)
5. 提出處—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韓國大學敎育協議會 (전화 783-3891, 3067)
6. 附 記
① 國漢文을 혼용하되 漢字를 제한하고 필요할 때에는 原語를 併記해 주십시오.
② 論壇原稿에는 반드시 200字 이내의 要約文이나 拔萃文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③ 제출된 원고는 編輯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게재합니다.